

# “정부에 장기적 쌀값 안정 정책 요구”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 도 농민단체와 ‘쌀값 폭락 대책마련’ 현장간담회 가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7일 전북을 방문해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손을 잡았다.

추미애 대표와 김춘진, 송현섭, 양향자 최고위원, 윤오중 정책위의장, 윤관석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제 벽골제로 논 현장 인근에서 전북지역 농민단체와 ‘쌀값 폭락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추 대표는 이날 “정부는 당장 올해 신곡 소비량(2015년 기준 397만톤)보다 초과되는 생산량을(올해 생산량의 20%이상) 즉시 시장 격리해야한다. 또 내년 포잉생산 조절을 위해 쌀생산조절제 눈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쌀 소비 대책으로 “제고량 소진을 위한 가공용·사료용 공급을 확대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의 홍수피해지역에 지원하거나, 북한의 다른 생산품과 맞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쌀은 식량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제논리만 따질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과 쌀 제고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오중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농정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5만9천원)의 동결과 산지 쌀값이 작년 수준인 15만8천원대로 회복될 때까지와 생산량의 100만t 이상(25%) 시장격리 물량 확대, 재고물량 사료화(30만t 이상), 획기적인 쌀 소비대책 마련, 북한 수해지역의 인도적 지원 즉각 재개 등 4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도 정부의 농업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위원 등이 김제시를 방문, 쌀값 폭락 등에 반발해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같이엮은 논을 돌아보고 있다.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농업은 제2의 안보”라며 “곡물자급률은 24% 불과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은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타작물 전환과 정부 예산지원이 절실한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전액 삭감했다”며 “추미애 대표와 윤오중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

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쌀값 폭락에 따른 바근해 정부의 인위적인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농민단체에서는 김석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임신구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회장, 김장섭 전북 쌀전업농연합회장,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최규업 김제농민단체 상임대표와 현지 농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길 것(정부는 10월말 예정) △획기적인 쌀 소비대책 마련 △북한의 인도적 쌀 지원 재개 △생산조정제도 지속 요구 △경영회생자금 이자율 인하(현재 3%)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인하 반대 △시장격리물량 확대 등을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농민단체 대표들은 간담회에 앞서 고(故)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신광영 기자

### 조배숙 “가정만 ‘봉’ 인 전기요금 체계 고쳐야”

최근 5년간(2011~2015) 일반 가정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보다 전기를 26,877GWh 덜 쓰고도 무려 9조원이 나 많은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가정용 전기는 총 324,895GWh를 사용하고 40조2,633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지만,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는 351,772GWh를 사용하면서도 전기요금은 31조 8,000만 납부해, 오히려 26,877GWh를 덜 쓰고도 전력다소비 15개 기업들보다 무려 9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5,618GWh 사용으로 8조 1,161억원을 납부한데 반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보다 9,253GWh를 더 사용한 7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원 가량을 적게 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새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배숙 의원은 “일반 가정에 (정발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먼저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아무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전기를 쓰고도 9조원이나 더 납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현)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영광 한빛원전 온배수 오염실태 밝혀라”

#### 김중희 “곰소만지역 어민피해 조사 보상해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중희 의원(김제·부안)은 27일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영광 한빛원전의 온배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지표 은폐 의혹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에게 명백하고 철저한 조사와 해당지역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빛원전이 지난 2002년 원전 5.6호기 건설에 앞서 정부는 온배수피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나서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를 강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방류제를 건설함으로써 오히려 원전 온배수가 고창, 부안 경계지역 곰소만의 어장이 완전 소멸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은 부안, 고창지역 온배수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2년도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고 중간보고서를 발간했으면서도 어민들에게는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속여서 17km 예측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준 반면, 영광지역은 중간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35km지역을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20.2km지역까지 보상해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시 한수원이 고창범대위와 “용역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한다”라고 합의해 놓고 2002.6.15. 중간보고서에 심각한 내용이 발견되자 이를 은폐시킬 목적으로 2002.10.26.에 “1차보고서는 기술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보고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한수원과 고창범대위는 2002년 말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협력한다”라는 협의를 다시 작성하고 서둘러 피해 어민들에게 용자를 미리 해 주었던 사실이 의심이 간다고 추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책 촉구

### 최훈열 도의원, “사고 발생시 많은 피해 입을 것 알면서 예산 마련 매우 소홀”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한빛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탈핵에너지전환추진위원회와 27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한빛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방재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8~10km 정도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설정됨에 따라 전북에 미칠 영향과 전북 차원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훈열 위원장은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전북지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지난 4년간은 관련예산조차 없었다”며 “최근 경주지역의 지진으로 영광한빛 인근에 있는 전북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방재대책을 더 이상 남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라북도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전북도 행정도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응하는 예산 마련은 매우 소홀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현석 에너지정책의행동 대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전라남도는 해당지역인구가 기존 1만4,614명에서 7만9,355명으로 4.9배 증가했고 전라북도는 기존 4,232명에서 6만3,391명으로 15.7배 증가했다”면서 “이는 전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 변화는 울산(35.5배), 부산(20배), 강원(16.7배)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대전(9.5배), 경북(5.6배), 전남(4.9) 보다는 크다. 특히 전북은 대비해야 할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전형적인 농촌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북의 방사능 방재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방사능 방재예산은 살펴보면 2014년 1억5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4억 5,024만원, 2016년 21억 7,775만원으로 급증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 2012~2015년까지 예산편성조차 없었으며, 올해는 국비 240만원을 포함해 전체예산이 340만원에 불과, 전남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광영 기자

축성 563주년

# 제43회 고창 모양성향제

2016.10.5(수) ~ 9(일) (5일간)

고창군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먹사는 미래다”